

배포일시	2025년 10월 17일
보도일시	즉시

‘대한민국-캄보디아 합동수사TF’ 설치 촉구

-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 캄보디아 상원과 긴급 회동 -

- 캄보디아에 급파된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이하 대책단)이 캄보디아 상원과 긴급회동을 갖고 ‘대한민국-캄보디아 합동수사TF’ 설치를 촉구했다.
- 민주당 대책단(단장 김병주 최고위원)은 현지 시간 10월 17일(금) 오전, 캄보디아 상원 의회를 찾아 니엥 팻 상원 부의장(내무·국방·인사·국경업무위원장) 등 상원 관계자 6명과 긴급 회의를 진행했다.
- 캄보디아 측은 우선 한국인 사망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 대책단은 조만간 이뤄질 한국인 송환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가해자든 피해자든 한국인은 국내로 송환 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지 스캠 단지에 대한 적극적인 수색 및 정찰을 캄보디아 측에 강력히 요구했다. 캄보디아 측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 특히, 김병주 단장은 ‘대한민국-캄보디아 합동수사TF’ 설치를 제안하며 양국 수사인력 보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캄보디아 측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대책단은 이어 범죄 조직 소탕과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TF 소속 한국 경찰에게 한국인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캄보디아 측 역시 긍정적으로 답했다.
- 이와 함께 김병주 단장은 캄보디아 경찰의 수사 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 경찰의 사이버 범죄 교육 지원을 제안했으며, 캄보디아 측은 감사의 뜻과 함께 정부 차원의 검토를 약속했다.

- 캄보디아 상원 측은 온라인 스캠이 여러 나라가 연루된 복합적인 문제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인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해결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 민주당 대책단은 이에 대해 “한국인이 연루된 스캠 단지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수색·정찰을 통해 스캠 단지가 자리 잡을 수 없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상원 측은 훈 마네트 총리 역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전하며, 이번 문제로 훼손된 캄보디아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양측은 앞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긴밀히 소통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한편 민주당 대책단은 현지 시간 10월 17일(금) 오후 현지 재외동포 2차 간담회를 진행한 뒤 범죄단지 현장을 살펴볼 계획이다.

2025년 10월 17일(금)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

단장 : 김병주(최고위원)

부단장 : 황명선(최고위원), 임호선(수석사무부총장), 홍기원(외통위원)

[별첨]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캄보디아 상원과 긴급 회동



▲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앞줄 왼쪽 단장 : 김병주 최고위원)
캄보디아(앞줄 오른쪽 니영 팻 상원 부의장-내무·국방·인사·국경업무위원장)

